특검 공정성 공방에 한덕수 구속 논란까지… 예결위 격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국힘 "대통령 재판 개입 우려"
조작기소특검 이해충돌 논쟁
민주당, 한덕수 구속 영장 촉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공소취소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기로 석방될 수 있단 점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인데, 여당이 특별 검사 후보자를 추천한다"며 "그 결과 임명된 특별검사에 의해서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되고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그리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그러면서 "이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고 누구도 자기 사건의 수사관을 직접 정할 수 없다는 근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문제의 특검법엔 공소취소 권한 규정이 있었는데,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를 삭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남아있다.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 수사, 기소 과정과 제출된 증거를 사후에 별도로 다시 조사하는데, 그 결과를 기존 재판에 활용할 경우 재판부의 독립적인 심리 그리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대상에 올라온 17건 중에 8건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되거나 관련된 사건들"이라며 "여기서 기소가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나. 공소 기각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추후에) 활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것도 이해충돌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 수사로 말미암아 편파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도 이해충돌이다. 17건 중 8건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됐는데 왜 이해충돌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률의 제정은 입법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뺀 것은 특검이 대통령 재판을 넘겨받는 권한이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재판을 지우는 그런 길은 막았다"면서도 "(특검에서) 조작기소였다고 결론 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통령 측은 이 결론 자체를 재판에 그대로 증거로 낼 수 있다. 얼마든지 길은 열려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도 신천지 교인 당원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처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사안을 특검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올해 초에 국민의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당원 명부 전수 조사까지 요구했다"며 "민주당도 우리 당에 대해서 요구한 만큼 똑같이 특검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조차 신천지의 조직적 민주당 입당 그리고 당내 선거 개입 가능성이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조사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일주일 간 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했다"며 "국민의힘에는 당원 명부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면서 자신들의 의혹은 비공개 조사로 덮겠다는 것이 내로남불이 아닌가.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는 21일 구속만기로 석방될 수 있다"며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 사건에서 1·2심 모두 중형을 선고 받은 한덕수 피고인이 대법원의 판결 지연으로 석방된다면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서 이진관 재판부에서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오는 30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내란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기존 사건의 구속 기간이 11월20일에 만료되면 별도의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11월30일 선고에서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약 열흘동안 불구속 상태가 된다. 별도의 1심 재판부에서 오는 20일 전에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는 중대 사건의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사법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민석 "조희대 사법부, 내란 재판 늑장"

전남광주서 민주당 최고위 주재
"내란 청산, 사법 농단 바로잡을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찾아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이 부활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를 청산하고 사법 농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4층 열린시민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부정부패를 단죄하고, 정치 검찰의 시대착오적 권력 남용과 조작 기소를 뿌리 뽑고,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 농단을 단호하게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12·3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는 명태균 관련 오세훈·윤석열 무죄, 김건희·임성근 감형 등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 대선에 개입할 땐 7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범 심리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렸을 뿐"이라며 "내란 재판에 손놓고 있는 것은 내란범들을 하나 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로 인해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법정 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에 선전 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경우 모든 이후의 전개와 책임을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연임 논란 선 긋고 개헌 논의 본격화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 회기 내 개헌을 완수하기 위한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곧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개정안을 제안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장은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이것(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 아예"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선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야당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조 의장은 개헌 실현을 위해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으로 국민의 뜻도 모으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개헌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강조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다.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보는 일이다. 20년도 남지 않은 2045년,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큰 설계도가 필요하다"며 "그 설계도를 그릴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며, 그 첫 장이 새 헌법"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사과에도 여전한 신천지 의혹… 김민석 책임론 확산

징계청원까지 당내 갈등 확산

더불어민주당 내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민석 대표가 지난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사과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윤리심판원에 김 대표에 대한 징계청원까지 접수됐다. 향후 김 대표의 대응이 갈등 수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권리당원 A씨는 전날(10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김 대표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김 대표가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상대 후보와 지지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내 분열을 초래했다는 취지다.

A씨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청원서에는 김 대표가 근거 없는 신천지 관련 주장을 이어가면서 당원들의 명예와 자유로운 후보 선택을 훼손했고, 당내 갈등을 야기했다고 돼 있다. 또 A씨는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 조사 이후 김 대표는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었다고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근거와 조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논란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법 제52조 제2항(당대표 경선 등의 허위사실 공표죄) 등을 근거로 김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 대표의 사과에도 비판이 지속되고, 징계청원까지 올라오면서 당내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